

설 법상 민심 잡아야 총선 주도권 잡는다

명절 대화 지역 여론 형성 대세론 되고 귀성객따라 수도권 표심 영향
여야 예비후보들 고속도로 진출입구·터미널·기차역 등서 지지 호소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4·10총선 공천 (단수공천) 결과를 일부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탈당·정당 등을 통해 야권이 다량해졌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47석) 배분 방식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준연동형'으로 확정되면서 쉼보도 복잡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오는 9일-12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의 '총선 시계'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따라 총선의 초반 주도권을 쥌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각 정당 지도부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등도 총선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 현역 의원들은 서둘러 지역구를 찾아 조지를 다지고 있으며, 각 정당도 광주·전남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구와 터미널·기차역 등지에서 고향을 찾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여야가 설 연휴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각종 선거 이전의 명절 민심이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명절에 나는 대화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종의 '대세론'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도 광주·전남지역 고향을 찾는 수도권 귀성객들이 지역 여론에 영향을 받아, 향후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지역 추석 연휴 여론을 선점해야 하는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121석에 달하는 수도권이다. 이는 지역구 의석(253석)의 절반가량이며, 전체 의석(300석)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영호남 등 지역에 따른 여야의 지지층이 견고한 상태에서 총선 전체 판세는 수도권의 민심에 달렸다. 수도권을 선점한 진영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도권 표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호남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호남 출신 지역민 비율이 높고, 과거 각종 선거에서 호남 표심이 수도권 유권자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

쳤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최근 일부 경선 지역 발표 등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번 설 연휴가 총선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로, 광주 3곳을 포함해 지역구 23곳을 우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광주 1차 경선 지역 3곳은 광주 동남갑, 북구갑, 북구를 선거구로 2인 경선이 진행되며, 모두 현역 국회의원과 1대1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1차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며,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또 1차 경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와 전남지역의 2차 경선 지역은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하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 역시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차 총선 후보자를 모집해 광주는 선거구 8곳 중 5곳에 6명이 등록을 마치고, 전남은 10곳 중 7곳에 8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설 연휴 본격적인 표밭다지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녹색당과 정의당의 총선 연합정당)과 진보당도 설 연휴 동안 광주·전남을 누비며 설 민심을 두드린다. 이들 정당의 입후보자들은 지역구 행사를 중심으로 민생 행보에 나서고, 이색 플래카드를 광주·전남지역 주요 길목에 내걸며 이목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는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에게도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탈당과 창당, 합당 등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설 연휴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나온 뒤 독자 노선을 걷게 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에게도 고향 민심은 향후 정치 일정에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설 민심에 따라 이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간 합당을 통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책임위원회의에서 "호남 정치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출마할지, 전국 선거를 지원할지, 출마한다면 광주를 포함해 어디서 출마하는 게 국가와 호남과 당에 도움이 될지 당과 상의하겠다"고 '호남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경우, 공천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설 연휴 기간 '마지막 공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금은 정책·공약 알아야할 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둔 7일 오전, 광주시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역 의대, 교수 충원·실습 시설 확충 지원"

정원 2천명 확대에 앞서
교육환경 추가 투자 시급

정부가 현재 3058명인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의대별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지역 의대들은 당장 교수 충원과 실습·연구를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지적돼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 각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증원은 주로 비수도권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큰 폭의 증원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 8곳, 경기 3곳, 인천 2곳을 제외한 27곳이 비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의대에 증원이 집중된다면 당장 교육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정부에 증원 필요성을 건의하기는 했지만, 학교별로 처한 여건에 따라 강의실이나 교수진, 실습·연구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당장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회장은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떠맡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교육 현장에 벌어진 대혼란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즐겁고 건강한 설 보내세요



완도 죽골도 지킴이 부부의 설 희망가 ▶6면

설 연휴 가볼만한 곳 ▶8면 / TV 가이드 ▶23~25면
9~12일 신문 쉼니다 / 인터넷 광주일보 뉴스 계속

설 연휴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2/8	-2/8	-1/10	1/9	-1/12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문명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청년농업인 성공 1번지 전남으로 오세요!



-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
- 스마트팜 영농기술 전수! (20개월)
- 창업자금 지원! (최대 5억원)
- 청년농 창업농장 조성지원 (최대 25백만원)



문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42)